

인공지능 기초부터 초거대 모델까지 무료로 배운다

광주시 'AI 융합아카데미' 운영...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맞춤 교육 3월부터 실무 적용 가능한 AI 심화 과정 개설...연말까지 상시 모집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초부터 초거대 AI 모델까지 체계적인 AI 전문 교육을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 사업단)에 따르면 AI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AI 융합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

'AI 융합아카데미'는 기업의 수요에 맞춘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최신 AI 동향을 분석해 개발한 'AI 커리어 맵'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과정은 AI 입문(5강), 기초(8강), 최신 기술 동향을 다루는 세미나(1강)로 구성된다.

주요 강의를 ▲AI 빅데이터 분석 입문 ▲자연어 처리 기초 ▲딥러닝·머신러닝 개념 이해 ▲AI를 위한 파이썬 코딩 ▲초거대 AI 모델 세미나 등 총 14개로 마련했다.

3월부터는 AI 심화 과정(9강)이 추가 개설되며, 실무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I 커리어 맵'은 AI 사업단이 국내외 AI 산업을 분석해 개발한 전문 교육 체계이며, AI 분야를 ▲데이터 기술 ▲AI 모델링 ▲AI 기반 서비스 ▲AI 플랫폼-인프라 ▲AI 비즈니스 개발 등 5개 핵심 직무로 구분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사이언스, AI 기술 융합, AI 비즈니스 기획 등 13개 직군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AI 융합아카데미'는 AI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최신 AI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세미나도 함께 운영된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제공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모집하며, AI 융합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https://portal.atops.or.kr/lm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상진 AI사업단장은 "AI 융합아카데미는 광주 AI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AI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4940억원 투입...무상보육 추진

2025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심의·의결

전남도가 18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보수 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급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 원 외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6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6000원 인상해 학부모

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료 전액을 차액보육료로 지원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없다. 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타 시도 수준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월 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000원 늘리기로 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보육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940억원을 투입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보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 SOC 구축 대도약의 시대 실현 결의대회'에서 시장·군수들과 전남도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SOC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실천결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SOC 확충 결의대회...“국가계획 반영에 행정력 집중할 것”

윤석열 탄핵인용 파면 촉구도

전남도가 미래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 16개 시장·군수 등 200여명은 이날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SOC 구축 대도약의 시대' 실현 결의대회를 갖고 핵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확고히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제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국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인 만큼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 반영시켜야 한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전남도는 핵심사업 33건, 52조 1000억원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건의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철도 분야는 ▲호남고속철도·경전선 연결선 ▲서해안 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별교-고흥 연결철도 등 8건(36조 4000억원)이며 고속도로에서는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등 5건(12조 4000억

원)이다. 국도·국지도의 경우 고흥-봉래,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20건(3조 3000억원)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록 지사는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전남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전남 핵심사업이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사와 22개 시장·군수 등은 이날 보성에서 반헌법적 계엄령을 근거로 국회를 통제하고 정치인 체포·구금을 시도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을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의회, 이번엔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 확대' 공개토론 놓고 신경전

"강 시장 직접 참여하고 토론편위도 도시계획 전체로 확대해야" 요구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에서 제안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수용하는 대신 토론편위를 도시계획 전체로 확대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직접 참여까지 요구해 논란이다.

광주시의회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용적률 완화 조례 제정을 강행한 뒤 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등 떠밀리듯" 공개 토론회를 수용한 뒤 핵심 쟁점을 벗어난 단서 조항 수용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 공개 토론회 제안을 적극 수용하며 강기정 시장의 토론 참여를 제안한다"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개정뿐 아니라 광주의 도시계획 전반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시의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광주시는 담당 국장이 토론회 참석자로 나서겠다고 제안했지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토론회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강 시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일단 이날 내에 TV 토론회를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으며, 아직까지 최종 토론자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이 토론회 제안이자 실무 책임자인 만큼 강 시장의 공개 토론회 참여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에서 공개 토론회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토론편위를 놓고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제정'만으로도 집중 토론할 내용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광주 도시계획 전반으로 토론편위를 확대할 경우 공개 토론회의 핵심 쟁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시의회가 광주시의 공개 토론회 요구를

수용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는 듯하지만, 시민 여론 악화와 집행부-시민사회단체 등의 잇따른 반발에 어쩔 수 없이 공개 토론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일단 공개 토론회를 내서 가는 했지만, 시의회 내부에선 조례 제정안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공개 토론회 범위를 넓히고, 토론 대상으로 강 시장을 고집하는 것도 토론의 핵심 쟁점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분회의에서 총장·군남도,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의견을 밝힌 반면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시 전체 주택 미분양 심화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대한민국 유일 민립대학 조선대학교

대학의 경계를 넘어 지역과 함께 미래로!

교육부 G-LAMP 사업, 호남권 유일 선정
뇌·신경과학·기초의학분야 연구거점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12년간 22,000여 명 치매 정밀검사
세계 최대 빅데이터 활용 노인성 뇌질환 시닥터 개발 목표

국내 최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역거점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해양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선도
해양헬스케어 유효성실증센터' 구축
창업선도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센터 운영

항공·우주분야
2022 누리호 2차 발사 큐브위성 탑재
2026 누리호 5차 발사 큐브위성 탑재(예정)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선정